

## 2.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작성 지원

### 1)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KDI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기 견인차가 되었던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은 제1부 KDI 설립의 당위성 설명에서 소개하였다. 특히 2차 계획은 정부가 정식으로 초청한 해외 석학들이 처음부터 참여하여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작품이었지만, KDI가 설립된 해에 확정된 3차 계획은 이들 해외 석학들의 도움을 줄이고 우리 힘으로 계획을 작성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이처럼 외국 학자들의 도움을 줄이고 우리 주도하에 3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주무 부처인 경제기획원에 1·2차 계획 수립 때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고, 외국에서 실물경제를 연구한 몇몇 경제학자들의 노력으로 계획작성기법이 많이 향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1년 7월부터 먼저 귀국한 KDI 수석연구원 일부가 계획의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 기여를 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3차 계획 역시 외국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자문을 받기는 하였으나 2차 때처럼 전적으로 그들의 도움에 의존하지는 않았다.

또 하나, 2차 계획 수립과 다른 점은 정부 관계 부처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1·2차 계획은 경제기획원이 주도하고 관련 부처는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쳤으나 3차 계획부터는 관련 부처로 하여금 소관 부문별로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케 하여 실무자의 의견과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이 3차에 걸쳐 쌓은 경험을 살려 1976년 완성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KDI가 원장 이하 수석연구원 전원이 거원적(擧院的)으로 참여하여 처음으로 계획의 '국산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었다.

3차 계획 수립 때와는 달리 4차 계획 수립에는 심의기구에서부터 실무계획반에 이르기까지 정부 각 부처 장·차관 전원과 과장급 실무자가 고루 참여하고, 민간 경제주체인 각 경제단체와 대학교수, 금융계·법조계·교육계·언론계·정당의 대표와 민간 실무자가 고루 참여했다. 참가 인원은 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로부터 22개 실무계획반원에 이르기까지 총 4백여 명에 이르렀다.

특히 민간단체와 민간기관의 직접 참여는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계획작성과정에서 민간 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4차 계획 수립 작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해당 부처의 실무책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2개의 실무계획반을 편성하여 작업을 분업화하고, 각 계획반에서 작성한 부문별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토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政策協議會)를 활성화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국내 최고의 경제 브레인 집단인 KDI로 하여금 이 정책협의회를 주관케 하여 계획의 기초단계에서부터 내용의 객관적인 현실성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4차 계획의 작업시스템은 1)경제계획심의회, 2)경제계획조정위원회, 3)실무계획반의 3단계 조직으로 구성했다.

최고 심의기구인 '경제계획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위원 전원과 경제과학심의회 상근위원, KDI 원장, 경제단체·교육계·언론계·학계 등 각 분야별 직능단체의 장 등 총 45명으로 구성하였고, 계획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제계획조정위원회'는 경제기획원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의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한국은행 부총재·각 경제단체 부회장·학계 중진 교수 등 총 3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부문별 계획의 검토와 조정 및 관련 정책의 종합·정리를 담당하였다. KDI에서는 구분호 부원장이 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했다.

'실무계획반'은 각 주무 부처의 1,2급 공무원을 각 계획반의 반장으로 하고, 해당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반원으로 참여시켜 22개 반을 구성하였고, 계획의 입안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부문별 계획안 작성 등 실무작업을 전담케 하였다. KDI에서는 각 부문마다 해당 분야를 전공한 수석연구원 1,2명씩이 참여하여 실무계획반을 이끌었다.

실무계획반에 참여한 KDI 수석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았다.

- 총량계획반 - 송희연·김윤형 수석연구원
- 국제경제반 - 김적교·서석태 수석연구원 및 김계원 연구원
- 인구계획반 - 김대영·김선웅 수석연구원
- 자원계획반 - 유병서 주임연구원
- 내자동원계획반 - 사공일 수석연구원·박영철 초청연구원
- 재정계획반 - 박종기 수석연구원
- 무역계획반 - 홍원탁 수석연구원
- 국제협력계획반 - 서석태 수석연구원
- 물가유통계획반 - 송희연·김윤형 수석연구원
- 지역사회개발계획반 - 반성환 초청연구원
- 농수산계획반 - 문팔용 수석연구원·반성환 초청연구원
- 에너지계획반 - 김윤형 수석연구원

- 중공업계획반 - 김윤희 수석연구원
- 경공업 및 화학공업계획반 - 김영봉 수석연구원
- 국토 및 산업입지계획반 - 송병락 수석연구원
- 수송계획반 - 송병락 수석연구원
- 통신계획반 - 유훈 초청연구원
- 교육계획반 - 김영봉 수석연구원
- 주택 및 토지계획반 - 송병락 수석연구원
- 보건 및 사회보장반 - 주학중 · 박종기 수석연구원
- 고용 인력 및 과학기술개발반 - 김수곤 수석연구원

이처럼 총 22개 실무계획반 중 21개 반에 KDI의 수석연구원과 초청연구원이 고루 참여한 제4차 5개년 계획은 1974년 12월, 계획의 기본목표 설정을 위한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KDI 주관으로 개최하면서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5년 6월, 제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4차 계획 작성지침을 토의한 뒤 각 실무계획반별로 계획작업에 들어갔다.

실무계획반별 계획 수립작업은 약 1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수석연구원들은 각 실무계획반의 계획 수립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선진 외국의 계획기법을 도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 출장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4차 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해외 출장은 김만제 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석연구원들이 각각 1개월 내지 2개월씩 다녀왔으며, 방문한 곳은 10여 개 국가에 이른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원활동을 하는 한편, KDI는 외국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하였다. 4차 계획에서는 IBRD 등 국제기구의 협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한하여 외국 전문가의 자문보고서가 참고되었는데, 이를 위한 부문별 정책과제와 토의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KDI가 수행하였다.

약 1년간의 작업 끝에 22개 계획실무반별로 계획안이 작성되자 KDI는 1976년 7월과 8월, 2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마지막 정책협의회를 개

최했다. 이 정책협의회에서는 수송·통신·국토개발·무역 및 국제수지·농업·과학기술·공업·내자동원·에너지 및 자원·사회개발·인구·고용·교육 및 인력개발 등 부문별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별도로 주관하여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 계획안에 반영시켰다.

이 밖에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작업에는 각 실무반별로 참가한 KDI 박사들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계획의 과학성을 높인 부분도 많았다. 그 한 예로 김수곤 박사의 IO테이블의 경우를 들어본다.

1974년 여름 서석태 박사와 함께 KDI에 들어온 김수곤 수석연구원은 고용인력분야 실무기획반 멤버로 참여하여 인력개발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서독과 스위스도 다녀왔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IO테이블을 만들어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는 데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 IO테이블이란 산업별·직종별 인력 수요를 새로운 통계적 기법으로 측정하고 과학적으로 수급계획 전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노동력 수요예측 테이블이었다.

김수곤 박사는 작성된 4차 5개년 계획의 투자계획과 산업구조를 자신이 만든 IO테이블에 적용해 보았다. 그러자 이미 작성한 부문별 투자계획을 그대로 확정하여 시행할 경우 노동력이 많이 남아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수곤 박사는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미 작성된 투자계획을 바꾸어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투자를 늘려 그쪽으로 노동력을 흡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결국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4차 계획의 투자 전략이 수정되었다.

이는 김수곤 박사가 KDI 수석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연구한 첫 번째 실적이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보람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IO테이블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계획 때도 활용되었고, 6차 계획 때는 박원구(朴煥求) 박사가 다시 작성하여 활용했다고 한다.

이 IO테이블의 예처럼 KDI 수석연구원들은 제각기 전공분야의 지식을 동원하여 4차 계획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은 착수 2년 후인 1976년 말 확정 발효되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목표로 제시한 것은 '성장·형평·능률'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자력성장구조를 실현시키고, 사회개발을 촉진하며, 기술혁신을 통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자력성장구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투자자원을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고, 기술 및 숙련노동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사회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고용·보건·교육·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농어촌의 전화(電化)·생활환경 개선·주택 보급·공해 방지에 주력하도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1981년까지 국민총생산의 1%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술 혁신과 능률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계획 목표가 실현되면 연평균 9.2%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들여 작성한 보람도 없이 4차 5개년 계획은 1·2차 연도에만 계획 목표를 초과하는 10.9%의 성장률을 보였을 뿐, 1979년의 2차 오일쇼크에 10·26사태라는 정치적 복병을 만나 후반 3년 동안은 성장률이 저조하였으며, 5년 평균 5.8%의 실적에 그쳤다.

## 2) 제5차 이후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KDI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작성을 위한 준비는 4차 계획 제2차 연도가 끝난 1979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처럼 조기에 준비작업을 시작한 이유는 그동안의 고도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경제 각 부문에

서 표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3차 계획부터 시작한 중화학공업의 과다투자로 발생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KDI는 경제기획원의 요청으로 1979년 초부터 5차 계획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수석연구원들을 동원하여 각 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과제보고서(Issue paper)를 작성하는 한편, 경제계획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안정화 종합시책에 대한 경제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바쁜 1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10·26사태의 발생은 정치·경제·사회의 기존 질서에 혁명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연초부터 착수한 5차 5개년 계획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 역시 이 충격적인 파문에 밀려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계획 수립의 당위성마저 부인하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어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경제기획원(편),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1982, p. 235)

20년 가까이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가 하루아침에 막을 내리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에서 있던 사람들이 제기하는 개발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론까지도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징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이끌어 갈 다음 통치자가 과연 그동안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할지도 당시로서는 미지수였다.

그동안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대소완급(大小緩急)을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는 밤샘까지 하면서 정책개발에 헌신하였고,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던 KDI 연구원들에게 10·26사태는 큰 충격이었다.

물론 선진국에서 최고 학위를 취득한 지식인으로서 유신 이후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많은 비판과 저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비판의 당위성도 수긍되는 점이 있었다. 그리고 KDI에서도 박 대통령의 경제 시각(經濟視角)에 우려를 표시하고, 중화학공업의 무리한 추진

등 경제정책에 반대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KDI는 설립 이후 정치적인 상황에 초연한 자세를 견지하며 김만제 원장 이하 모든 연구원들이 오직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전념하였고, 어용연구소라는 일부 비판의 소리에도 초연한 자세를 일관해 왔다. 나라 경제가 최소한 후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선진국형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반대와 비판을 누르고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주도해 온 강력한 지도자의 시대는 10·26사태를 계기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10·26사태 당시 김만제 원장은 고려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이었다. KDI 원장이 된 후부터 그는 남들이 쉬는 주말이나 일요일에 출근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연말연시에도 쉰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당시에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에서 때도 없이 요구해 오는, 시간을 다투는 정책문제의 연구를 위해서 밤을 새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원장으로서의 대소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격무에 근 10년 동안이나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몸을 혹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에 탈이 나는 일이 잦았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가끔 있었다.

대통령의 유고 소식을 듣고 김만제 원장은 27일 아침 병원을 나와 곧장 KDI로 달려갔다. 그리고 대통령이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회의실에 모인 연구원들과 함께 애도의 예를 갖추었다고 한다. 설립 당시부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연구를 뒷받침해 준 분에 대한 예의였다.

10·26사태 다음 날인 27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고 12월 21일에는 정식으로 10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과 혼미는 견힐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만제 원장은 KDI가 시급하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적 격변이 닥쳐오더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정책의 기본 틀은 무너뜨리지 않아야 그동안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이 지속될 수 있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KDI 연구진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신현확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당시 경제관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KDI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박 대통령 서거 직후인 11월 초라고 기억됩니다. 김만제 원장은 연하청 박사와 저에게 뜻밖의 연구과제를 주면서 급히 유럽으로 출장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두 사람에게 준 과제는 박 대통령 서거 후 있을지도 모를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비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리고 출장 목적은 부원장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이었지요.”

당시 최고참 수석연구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박종기(朴宗淇) 박사의 말이다.

김만제 원장의 비밀 지시를 받은 박종기·연하청(延河淸) 두 박사는 비밀리에 유럽으로 떠났다. 그리고 이들은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격변기를 체험한 스페인, 포르투갈 등 몇몇 나라를 찾아갔다.

“박종기 박사를 모시고 한 달 동안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돌면서 경제·사회부문의 석학들을 만나 자문을 받았고, 필요한 나라의 경우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장관과 해당 부서 관리들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스페인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스페인은 1975년 프랑코 총통이 죽은 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은 뒤 우리가 갔을 때는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하청 박사의 회고이다.

스페인은 1939년 프랑코 정권이 들어선 후 무려 36년 동안 1인 독재가 계속된 나라였다. 1975년 프랑코 총통이 죽자 그동안 억눌렸던 정치·사회·경제적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여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었고, 1977년 6월, 근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스왈레스를 당수로 하는 민족중도연합이 집권을 했다. 그러나 공산당·사회노동당 등 각 정당의 극한적인 반대 투쟁으로 근 반세기 만에 출범한 스왈레스의 민주적 정권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왈레스 정권은 민주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1977년 10월, 7개 야당 대표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몽크레아 협정’을 체결했다. 이 몽크레아 협정은 프랑코 사후 극도로 악화된 스페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당 간의 정치 휴전(政治休戰)을 약속하고 선언한 협정이었다. 이를 계기로 스페인은 수십 년 계속된 독재정권의 경제정책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혁명적인 개혁이 가져올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사회정책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몽크레아 협정은 여·야 정치인과 관리들이 모여 국가의 손실을 막기 위해 누가 정권을 잡든 독재정권이 추진하던 기존의 경제계획의 골격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은 하지 말자는 데 합의한 선언적인 약속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합의한 협정이지요. 10·26사태 이후의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스페인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몇몇 나라를 돌아본 후 1개월 만에 돌아온 우리 두 사람은 스페인의 예를 참작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박종기·연하청 두 박사의 이 보고서는 KDI에서 출판되지도 않았고, 보고서 원문도 보존되어 있지 않다. 당시의 민감한 정치상황에서 비밀리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였으므로 김만제 원장의 지시로 두 박사가 가지고 있던

보고서 원본까지 폐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그 내용은 두 박사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돌아와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진행 중인 경제계획의 골격은 허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4차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고 10·26사태로 중단된 5차 계획의 수립작업도 재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행 중인 경제계획을 백지화시키면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스페인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로서는 일종의 비밀보고서였기 때문에 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기억할 수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우리 두 사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만제 원장이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인 신현확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연하청 박사는 자신들의 보고서가 당시 경제기획원 등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1980년 봄부터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격화하면서 소위 '3김'의 정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신군부의 움직임이 표면화하는 등 한 치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개정국 속에서도 경제기획원과 KDI는 5차 5개년 계획 수립작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은 정치·사회적 격변의 와중에서 작성작업에 들어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1979년 초부터 KDI가 분야별로 준비한 과제 보고서를 정리하고 26개 부문 중 각계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교육·환경·농업·주택 및 토지·과학 및 기술혁신·환경·산업전략·총량계획 등 10개 주요 부문별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80년 4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10회에 걸쳐 KDI가 주관한 부문별 정책협의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165명이 참여하였으며, KDI에

서는 사공일 연구위원과 남상우 연구조정실장이 전반적인 기획·조정·집행을 맡았다. 그리고 김광석 부원장과 박종기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주학중·송병락·문팔용·이규억·김인수·남종현·서상목 박사 등 책임급 연구원이 과제별 토의자료를 준비하는 등 4차 계획 작성 때와 마찬가지로 거원적으로 참여했다.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작성한 지침에 따라 실무계획반별로 작성한 계획안은 81년 1월부터 5월까지 역시 KDI가 주관한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계획안의 최종 조정이 이루어졌고, 계획안의 최고 심의기구인 경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8월에 확정되었다. 10·26사태로 잠시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3년이 소요된 신중한 작업이었다.

5차 계획의 특징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사회'가 포함되고 '개발' 대신에 '발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이는 1인당 GNP 100달러 미만의 최빈국 시대에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도 중요시하고, 개발이 의미하는 양적 성장전략과 함께 발전을 의미하는 질적 성장전략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명칭의 변경이었다.

이런 의지는 실무계획반의 편성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되었다. 4차 계획 때의 22개반보다 더 많은 26개 실무계획반이 편성되었고, 그동안 개발 우선 정책에 밀려 소외되었던 환경보전·사회개발·사회보장·보건 및 의료·소득분배·주거 및 도시문제·노사관계·고용 및 인력개발분야 등의 실무계획반이 편성되어 이 분야의 발전계획을 처음으로 5개년 계획에 담았다.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찍부터 KDI의 정책건의 중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KDI는 70년대 중반부터 이 분야를 전공한 박사들을 유치하기 시작하여 김수곤(金秀坤; 노동경제)·김선

웅(金善雄: 인구정책)·민재성(閔載成: 사회보장)·연하청(延河淸: 보건경제)·김동현(金東鉉: 사회개발)·서상목(徐相穆: 사회개발)·구성렬(具成烈: 노동경제)·박세일(朴世逸: 노동경제) 박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들은 5차 계획의 사회발전분야 계획 수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실시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개발정책을 연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KDI는 5년마다 되풀이되는 5개년 계획 수립작업에 거원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으며, 1986년과 1991년에 작성한 6차와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때에도 같은 비중으로 참여하였다.

5개년 계획 수립 때마다 한결같이 KDI가 담당한 중요한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수립작업의 모체인 계획모형을 매년 새롭게 개발하는 연구를 전담하였고, 둘째 총량계획반을 비롯하여 각 실무계획반에 책임급 연구원 전원이 참여하여 부문 계획의 입안 실무를 지원하고 계획안의 조정에 필요한 정책연구를 담당하였으며, 셋째 수많은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주관하여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넷째 선진국의 새로운 계획기법과 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 이용케 하는 한편 외국 자문단의 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1년 11월에 확정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시행 2차연도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갑자기 대체되었다.

과거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폄하하고 자신이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된 문민정부의 대통령임을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당 인사와 학계·경제계·정부의 경제관료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작성, 3월 22일부터 실시하였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작성케 하고 '100일 계획'이 끝나는 7월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작성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6차에 걸쳐 계승 발전시켜 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기조는 크게 바뀌게 되었다.